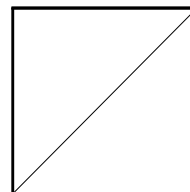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2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 27. (제 2 차)

의
결
사
항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1. 27.

1. 의결주문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667억 90백만원을 초과 취급한 행위, 동법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에게 영업의 일부정지 6월, 과징금 91억 10백만원,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667억 90백만원을 초과 취급한 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동법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 前대표이사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을 통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3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2.18) 심의필

<별지>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과징금(91억 10백만원) 및 과태료(50백만원) 부과

* 위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신규 유가증권담보대출업무'만을 정지하고자 함(영업정지 조치 이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신규 대출,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 변경, 동일인 명의의 대환대출의 취급 및 한도거래방식의 대출의 한도내 인출거래는 영업정지 대상 업무 범위에서 제외)

○ 조치사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667억 90백만원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317억 60백만원의 210.30%) 초과하여 취급(2020.9.1.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하였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자료은폐 목적으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였으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을 위반하여 개인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법적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23조, 제24조 및 <별표 1>, 제38조의2, 제40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의2, 제32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대표이사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권고 상당) 통보

○ 조치사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667억 90백만원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317억 60백만원의 210.30%) 초과하여 취급(2020.9.1.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였음) 하였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자료은폐 목적으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였으며,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을 위반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였음

○ 법적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별표 1>, 제38조의2, 제40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의2, 제32조

2. 조치사유(지적사항)

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2. ~ 2020.5.21. 기간 중 ○○○○(주) 등 9개 차주에 대하여 법인, 개인 등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3건, 1,211억 5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20.1.31.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667억 90백만원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317억 60백만원의 210.30%) 초과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

(단위 : 억원)

구분	실차주	발행사 (유가증권)	명의차주	대출 취급일	대출금액		대출 한도 (B)	한도 초과액 (A-B)
					건별	합계 (A)		
(1)	○○○○(주) (4건)	○○○○(주) (CB)	(주)○○○○ (주)○○○○ (주)○○○○○ (주)○○○	2020.2.28.	23.75 23.75 23.75 23.75	95	63.5	31.5
(2)	○○○○(주) (6건)	○○○○(주) (BW)	○○○○○○○투자조합 ○○○○○○조합 ○○○○○투자조합 ○○○○○○○조합 ○○○○○개발조합 ○○○○○○○조합	2019.11.29.	47.5 24.7 22.8 47.5 47.5 47.5	237.5	59.5	178
(3)	○○○○○○○(주) (3건)	○○ ○○○○(주) (CB)	(주)○○○ ○○○○○○○○(주) (주)○○○○○○○○○	2020.1.16.	28.5 28.5 38	95	63.5	31.5
(4)	(주)○○○ (2건)	(주)○○○ (CB)	(주)○○○○○ (주)○○○○○	2019.10.2.	47.5 47.5	95	59.5	35.5
(5)	(주)○○○○○ (4건)	(주)○○○○○ (CB) (주)○○○○○ (BW)	○○○투자조합 (주)○○○○○○○ (주)○○○○○ ○○○○○○○투자조합	2019.10.25. 2019.11.11.	38.0 28.5 28.5 20	115	59.5	55.5
(6)	○○○○○○○(주) (3건)	○○ ○○○○(주) (CB)	(주)○○○ (주)○○○○○ (주)○○○	2020.1.31.	38 28.5 28.5	95	63.5	31.5
(7)	(주)○○○○○ ○ (2건)	(주)○○○○○ ○ (CB)	(주)○○○○○○○그룹 (주)○○○○○○○파트너스	2020.4.29. 2020.5.21.	90 25	115	91.1	23.9
(8)	이○○○* (7건)	(주)○○○ (CB) ○○○○○ ○○○○○ ○(주) (CB)	○○○○○○○○○○○○○ ○○펀드 ○○○○○○○○○○○○○ 펀드 ○○○○○○○○○○○○○ 펀드 ○○○투자조합 ○○○○○○○투자조합 ○○○○○컨소시엄 ○○○○○컨소시엄	2019.11.1. 2019.11.7.	50 50 50 50 50 50 50 50	150 200	8	342
(9)	○○○ (2건)	(주)○○○ (주식, 개인 채무상환)	◇◇◇ ○○○	2019.12.26. 2019.12.30.	8 6	14	8	6
합 계					1,211.5	1,211.5	476.1	735.4**

* (주)○○○, ○○○○○○○○○○○○○(주)(이상 코스닥상장법인)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등) 혐의로 2020.XX.XX. 구속 기소

** 이는 단순 합계 기준 금액이며, 위반기간 중 최고위반금액은 667억 90백만원(2020.1.31.)으로서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317억 60백만원의 210.30%임

나. 자료은폐 목적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검사 방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현장검사 사전예고 통지(2020.7.2.)를 받은 후 2020.7.10. 前대표이사 ○○○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 3명*의 업무용 PC를 점검하고, 이 중 특정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前대표이사 ○○○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 前대표이사 ○○○, ○○○○○본부장 ○○○, 前○○○○1·2팀장 ○○○

** ‘○○○○○본부 및 ○○○○○본부 여신진행현황’: (명의)차주 준비 예정사항, 차주별 자금 필요일자, 차주 확정 이전에 미리 책정한 금리 등이 포함

검사착수일(2020.7.13.)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PC 및 하드디스크 교체 현황’의 제출을 요구하자,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거짓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PC등의) 교체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음**

* 검사착수 당일 검사반은 저축은행의 전산자료 확인을 위해 특정 임직원의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PC사용현황’ 및 ‘PC 및 하드디스크 교체 현황(2019.9.2. ~ 2020. 7.13.)’을 요구하였음

** ○○○팀장 ○○○는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他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입수한 ‘○○○○○본부 및 ○○○○○본부 여신진행현황’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前대표이사 ○○○가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자인하였고, 그제서야 팀장 ○○○도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 및 허위 진술 사실을 시인함

다.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1.12. (주)○○○○이 동 저축은행에 대출 50억원을 신청하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의 영업력 확장 및 이익 제고를 위해 동사로 하여금 (주)○○○○에게 자금을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2019.11.15. ~ 2019.12.20. 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주)에 총 66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라이브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의 자회사(지분율 100%)로서 핀테크(P2P) 플랫폼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

** (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前실질대주주 ○○○의 지시에 따라 ○○○○○○○(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사로 하여금 대여토록 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을 취득하게 하고, 나아가 대출서류 양식 제공, 담보 질권설정 및 사후관리도 지원

*** ○○○○○○○(주)는 자금 대여기간(2019.11.15.~12.20.) 중 (주)○○○○으로부터 71백만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는바, 이 중 저축은행 수신평균금리(1.4%) 상당액을 차감한 66백만원을 이익 제공액으로 산정

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15. ~ 2020.4.23. 기간 중 ○○(주) 및 (주)○○○○○○○○ 등 2개 차주에 대해 영업활동 및 매출액이 전무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건, 162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실차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검사종료일(2020.9.14.) 현재 대출 잔액은 139억원임

타인 명의 신용공여 명세

(단위 : 억원)

구분	실차주	명의차주	대출취급일	대출금액
(1)	○○(주)	○○홀딩스(주)	2020. 4. 23.	82.0
(2)	(주)○○○○○○○○	(주)○○○○○○홀딩스	2019.10.15.	57.5
			2020. 3. 6.	23.0
합 계				162.5

마.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9.2. ~ 2020.7.13. 기간 중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실, □□실, ◇◇◇◇팀 등 소속 임직원 10명에게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 일부 조회 화면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검사대상기간 중 접근기록은 없었음)

관 계 법 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⑧ (생략)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제23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생략)

<별표 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 19.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8.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39. 제2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 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 다. (생략)

2. ~ 3. (생략)

제39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 14.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② ~ ⑥ (생략)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인인 자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5,000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별표 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 (3) (생략)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 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 사. "위반행위의 시점"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환을 의미 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환을 의미한다.
-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
-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1단계	2억원 이하	× 7/10
2단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20
3단계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7/40
4단계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7/80
5단계	2천억원 초과	× 7/160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1단계 기본부과율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
2천억원 초과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1,8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천억원)×5단계 기본부과율

6.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364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경기준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5% 감경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7. 부과과징금의 결정

-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금·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를 의미한다.
-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 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I.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가. 삭 제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8. 삭 제

9.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 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 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자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경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 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V. 비은행부문

V-1.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1. (생략)

2.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가. 제재대상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이하 “개별차주등”이라 함)한도 초과취급

나.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	차주별 한도초과취급액 비율(자기자본대비)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해임 권고/면직	30% 초과	50% 초과
직무정지/정직	20% 초과 30% 까지	30% 초과 50% 까지
문책경고/감봉	10% 초과 20% 까지	20% 초과 30% 까지
주의적경고/전책	5% 초과 10% 까지	10% 초과 20% 까지

주 1) 개별차주 등 한도 초과취급 합계액비율 10%까지, 차주별 한도 초과취급액비율 5%까지는 주의조치 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다만, 결산결과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2의2. (생략)

3. 가중 및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개별차주등 한도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의2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개별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다. 저축은행인수 및 출자자금 지원을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행위가 검사에서 지적되는 경우 취급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해임 권고(면직)조치할 수 있다.

라.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

마. <삭제 2010.8.31>

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등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기 타

2000.12.8. 이전에 취급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 한도 초과취급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1.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과징금 91억 10백만원 부과, 과태료 74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직원	감봉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신규 유가증권담보대출업무'만을 정지(영업정지 조치 이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신규 대출,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동일인 명의의 대환대출의 취급 및 한도거래방식의 대출의 한도내 인출거래는 영업정지 대상 업무 범위에서 제외)

4. 제재대상사실

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2. ~ 2020.5.21. 기간 중 ○○○○(주) 등 9개 차주에 대하여 법인, 개인 등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3건, 1,211억 5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20.1.31.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667억 90백만원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317억 60백만원의 210.30%)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

나. 자료은폐 목적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검사 방해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현장검사 사전예고 통지(2020.7.2.)를 받은 후 2020.7.10. 前대표이사 ○○○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 3명의 업무용 PC를 점검하고, 이 중 특정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前대표이사 ○○○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검사착수일(2020.7.13.)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PC 및 하드디스크 교체 현황'의 제출을 요구하자,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거짓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PC등의) 교체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다.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1.12. (주)○○○○이 동 저축은행에 대출 50억원을 신청하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의 영업력 확장 및 이익 제고를 위해 동사로 하여금 (주)○○○○에게 자금을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2019.11.15. ~ 2019.12.20. 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주)에 총 66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

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15. ~ 2020.4.23. 기간 중 ○○(주) 및 (주)○○○○○○○○ 등 2개 차주에 대해 영업활동 및 매출액이 전무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건, 162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

마.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9.2. ~ 2020.7.13. 기간 중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실, □□실, ◇◇◇◇팀 등 소속 임직원 10명에게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 일부 화면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2.9. 법상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자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7385